“대한민국 내 이주아동 출생 등록·체류권 정책 개선해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시민사회 보고서 공개…복지 등 정책 소외 지적
건강보험 미가입 체류 이주민 전체 40%…과도한 진료비 부담 등 문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이하 위원회)가 대한민국 내 이주아동에 대해 출생등록, 체류권 등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다문화 출생아 비율(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6.8%로 ‘전국 최고’인 만큼, 이주 배경 아동을 위한 정책 개선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들은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의 보호, 지원, 복지와 관련된 국내법과 정책들의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 국적 이주아동·청소년은 21여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 수는 1만~2만명에 달한다. 정부 통계에서조차 집계되지 않는 이들은 공적 교육, 보건, 복지 시스템으로부터 사실상 배제된 상태라는 것이 위원회 주장이다. 일부 아동은 16세가 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도 빈번했으며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니 이후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데에도 제약이 심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출생신고 누락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한국 국적자에만 한해 시행하는 등 외국 국적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위원회 설명이다.

위원회는 외국 국적 이주아동·청소년이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체계에 편입되지 못해 의료기관 이용 시 과도한 진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국내 체류 이주민의 비중은 전체의 4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과 까다로운 자격 요건에 건강보험 미가입 이주아동 중 극소수만이 이를 통한 지원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보육료, 유아학비, 아동수당 등은 국적 요건으로 인해 이주 아동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마저 지원 기준과 범위가 제각각이라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 역시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에만 적용되면서 이주아동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입학이 제한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권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 정부는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범칙금 부담이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시민사회에서는 18세 이하 ‘불법체류’ 외국인을 최소 1~2만명으로 추산하는 데 비해 법무부는 2025년 1월 말 기준 3434명이라고 집계하는 등 실질적인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출생등록과 체류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보육·교육·건강권 적용, 미등록 아동의 실태조사 및 사회보장 접근 확대, 아동의 구금 중단 및 대체 제도 마련 등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내놨다.

위원회는 “아동의 출생 등록은 국적이나 신분,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즉시 이뤄져야 하며, 정부는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등록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주아동도 부모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주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가운데 이주배경 청소년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에선 이주아동 성장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 개선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023년 통계청 자료(2022년 기준)에 따르면 전남의 다문화 출생아 수는 538명으로 지역 총 출생아 가운데 다문화 출생아 비율이 6.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다문화 가구 수는 1만 5천666세대(전국의 3.9%·8위), 가구원 수는 5만 1천131명(전국의 4.4%·7위)으로 전남 인구의 2.8%에 달한다.

지역 출생아 수 감소로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데 비해 전남의 이주배경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남의 전체 학령인구는 2016년 21만 3135명에서 지난 2022년 18만2171명으로 감소한 반면 이주배경청소년은 2016년 6977명(3.2%)에서 2022년 1만0347명(5.6%)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아 기자 jinggi@

“장애인 마음 놓고 방문하세요”

광주 동구, 식당 등 3곳 ‘열린가게’ 지정

광주시 동구가 장애인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식당 등 3곳을 ‘열린가게’로 지정했다. 〈사진〉

광주시 동구는 최근 ‘일품 양평해장국 광주계림점’, ‘국수나무 계림점’, ‘벌크커피 계림센트럴점’ 등 3곳을 장애인 친화 가게인 ‘열린가게’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열린가게’는 장애인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가게 내에서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화장실 등 이용에 지장이 없는 가게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가리킨다.

동구는 지난 2월 5일부터 3월 21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총 2119곳을 전수 조사해 장애인 친화적인 가게 54곳(식당 29곳, 카페 25곳)을 발굴했다. 이어 주무 부서와 조선대 장애 학생 지원센터, 동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등의 심사와 평가를 거쳐 3곳을 열린가게로 확정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에게나 평등한 열린 동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다문화 자녀 교재·독서실 이용비 지원

광주 광산구, 초·중·고교생에 카드 포인트…30일까지 신청자 접수

광주시 광산구는 이달부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며, ‘NH농협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자격증 취득 등 교육 목적에 한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 7~18세 자녀다.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나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2일부터 30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신청은 광산구 가족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이 지역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적응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정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첫 시범 사업을 벌여 534명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상수원 ‘주암댐 수질 개선’ 힘 모은다

지자체-수자원공사, 위기대응협의체…비상 대응 체계 등 점검

이상기후 심화로 광주·전남 주요 상수원인 주암댐의 수질 악화가 우려되자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중부권지사는 “지난달 30일 주암댐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광주시·목포시·나주시·화순군과 ‘주암댐 광역상수도 수질관리·위기대응 협의체’를 열고 주암댐 수질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주암댐은 좋은 수질을 유지했지만 최근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고 폭우와 가뭄을 오가는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녹조가 많아지고 있어 냄새 유입 등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암댐 이상 수질 발생 시 수질 모니터링과 수(水)처리 정보 공유로 대응하는 방안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 점검, 수도시설물 운영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남연 수자원공사 전남중부권지사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주민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한 눈에

광주 서구, 안내서 발간

광주시 서구가 주민 복지서비스를 누구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안내서를 발간했다.

서구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생애주기별, 분야별로 정리해 주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파악할 수 있는 ‘한눈에 보는 서구복지’를 펴냈다고 6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출생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복지정보 202건이 수록돼 있다.

1편은 ‘지역의료돌봄’이라는 주제로 서구 통합돌봄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요양비 지원, 의료급여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모바일안심케어서비스, 법률홈닥터 지원제도, 드림스타트 사업 등 내용이 실렸다. 이어 2편은 ‘착한나눔실천’이라는 주제로 착한동행 나눔사업, 희망플러스(+) 사업,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공영장례 지원, 찾아가는 빨래방 사업 등 정보가 담겨 있다.

3편은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을 다뤘으며 4편에서는 기초연금제도, 효드림수당,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어르신 복지’를 소개한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 자활지원, 여성·아동·청소년복지, 교육 복지, 보건·건강관리, 일자리 지원, 문화·체육 복지 등 11개 분야별 서비스와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수록해 구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책자는 서구 관내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기관 등에 비치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서구청 누리집(공개자료실)에서 전자파일로도 확인 가능하다.

/최류빈 기자 rubi@